

여권 패배 후

고삐 늦추지 말고

노동자 투쟁!

KBS 파업처럼, 삼성전자서비스 파업처럼



김종민



김종민

세월호 참사와
노동자 운동의 과제

▶ 3, 8~9 면

데이비드 하비의
파케티 저서
《21세기 자본론》 서평

▶ 14~15 면

유럽의회 선거와
파시즘·인종차별
반대 운동

▶ 12~13 면

의료 민영화에
관한 정부의 거짓말

▶ 6 면

공공부문 구조조정
또 다른 참사를
날을 신자유주의 개악

▶ 10 면

보도 통제에 맞서는
KBS 노동자 파업

▶ 16 면

누구의 말일까요?

“경제가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의 개선은 ONS가 최선의 경제통계를 제공 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영국 통계청(ONS) 수석 경제고문이 마약과 성매매를 GDP 계산에 포함하기로 한 ONS의 결정을 자랑하면서 한 말

“무례하게 굴지 마라. [소마탄광] 사고는 이미 벌어졌다. 신의 섭리다. 이 나라의 총리에게 아유를 하면, 매를 맞게 된다.”

터키 총리 에르도안

“이런 낭만이 있네요.”

서울지하철 철로 청소가 수작업이라는 말에 놀란 정몽준. 매일 해 보라 낭만인가

“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러느냐. 경찰이 아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다 들킨 경찰 정보와 형사들의 유체이탈화법

“대한민국은 생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최하위 계층에게도 여러분의 세금으로 생계비를 주기 때문에 절대 굶어 죽지 않지만, 그렇게 적당히 살겠다는 것은 꿈을 포기하고 앞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고승덕이 2011년 강남 자사고에서 한 말

“온라인 쇼핑물을 통해 영국 제품으로 화재 구조용 장갑을 1년에 2개씩 사비로 구입해서 쓰고 있다.”

“소방차랑 같은 경우, 5대 중에 1대가 이미 폐차시켜야되는 차를 계속 쓰고 있다.”

“서로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끔 남의 것을 가져가는 분들도 있다.”

소방관들이 밝히는 현실

“침투에 대비해 순찰하던 대원들이 긴급 투입되면서 벌어진 일”

소총을 소지한 경찰관이 청와대 앞 대학생 기습시위를 진압하고 한 번명

“살면서 가장 잘한 일 :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일”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묵묵히 이겨내며 박근혜 대통령과의 일거수일투족을 역사에 기록했던 나의 이야기는 훗날 가슴 벅찬 감동으로 자리할 것이라 믿는다.”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박근혜 호위무사 출사표?

“길거리에 돈이 있으면 집어 가는 사람이 있듯 여자들이 야한 옷을 입고 다니면 성폭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이윤성

“이전회 삼성그룹 회장님이 이승엽의 홈런 때 잠시 눈을 뜨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선수단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달라'고 하셨다.”

선수단의 '기적'을 전하는 삼성 야구단 사장

“자본주의 탐욕은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 제 개인적인 삶을 모두 버리고 비정상적 관행의 제거와 부정부패 척결 ...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의 관피아 척결 1호가 된 안대희, 총리 후보자 내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알바나 다름 없는 저질 일자리

이현주

5월 22일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5백91만 1천 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9천 명 늘어났다. 이 중 15만 9천 명이 시간제 일자리다. 시간제 일자의 증가가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는 데 가장 큰 구실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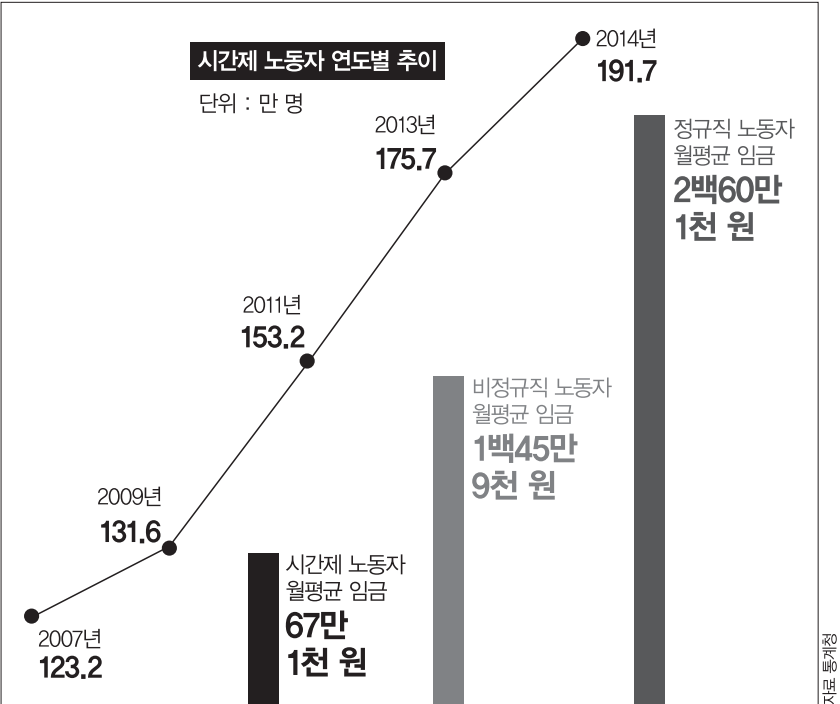
전체 시간제 노동자 수는 1백91만 7천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양산 정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가 저질 일자리임도 확인됐다. 시간제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67만 1천 원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2백60만 1천 원)의 4분의 1 수준이고,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1백45만 9천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한편, 시간제 노동자 중에서도 초단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이들은 매우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 5월 22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태와 법·제도적 보호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이런 현실을 고발했다.

초단시간 노동의 대표 사례는 초등 돌봄교실 교사들이다. 이들은 실제 일하는 시간이 주 15시간이 훌쩍 넘는데도 15시간 미만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 15시간 미만 노동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퇴직금 지급이나 무기계약 전환 의무를 회피하려고 이른다.

사용자들은 주당 노동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려고 온갖 수법을 동



원한다. 출근시간을 10분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10분 앞당기는 이른바 ‘10분 근로계약서’가 악명 높다. 이중 계약(평일용 근로계약서와 토요일용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기), 일자리 쪼개기(요일마다 다른 돌봄 교사를 고용하기) 등도 이뤄졌다.

당연히 임금은 형편 없는 수준이다. 학교에서 초단시간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돌봄교실 노동자의 경우 65만 원, 배식 노동자의 경우 26만 원이다. 웬만한 아르바이트 벌이보다도 못한 것이다.

초단시간, 초초단시간 ...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초단시간으로 일하는 초등 돌봄교사 수는 2013년에 1천1백71명에서 2014년에 약 3천2백 명으로 폭증했다(2백73퍼센트).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

부가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하면서 신규 일자리를 초단시간 일자리로 채운 것이다.

정부가 70퍼센트 고용률을 달성하겠다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대폭 양산하고 있는 꼴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말은 완전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최근 정부는 ‘초유연 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가 4~6시간 일자리라면 ‘초유연 근로’는 1~2시간 짜리 일자리다. 일이 필요할 때만 동원돼 일한다고 해서 ‘호출형 근로’라고도 불린다. 그야말로 ‘초초초초단시간’ 일자리이고 이름을 뭐라고 붙이든 그냥 ‘알바’다.

이렇게 ‘일자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저질 ‘알바’ 자리나 양성하겠다는 게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말하는 박근혜 정부 고용 정책의 실체다.

함께 참가합시다!

힘내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연대한마당2

일시 : 6월 4일(수) 오후 6시
장소 : 서초동 삼성 본관(강남역 8번 출구)
※ 매일 저녁 7시 삼성 본관 앞에서 투쟁문화제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4차 범국민촛불행동

일시 : 6월 7일(토) 시간 : 미정
장소 : 미정
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세월호 참사 박근혜 직접 책임!

노동인권 유린 삼성 규탄!

민중생존권 쟁취!

1차 시국대회

일시 : 6월 13일(금) 오후 3시

장소 : 서울 도심

주최 : 시국대회 조직위원회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분쇄, 낙하산 인사 저지 및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공공기관 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일시 : 6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미정

주최 :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

범국민대회

일시 : 6월 28일(토) 오후 3시

장소 : 서울 도심

주최 : 공적연급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

(가칭)연급 개악 저지 결의대회

일시 : 6월 28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 도심

주최 : 공적연급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

노동자연대 공개모임

대전충남지회 공개모임

왜 노동계급이 사회변혁의 핵심 주체인가?

연사 : 박성환 (노동자연대 활동가)
일시 : 6월 5일 (목) 오후 7시
장소 : 충남대학교 사회대 본관 공동학습실 316호
참가비 : 무료
참가 문의 : 010-2798-4258

경기지회 공개모임

스톤월항쟁 45주년 동성애 차별과 해방 성소수자 해방 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연사 : 양효영 (노동자연대 활동가)
일시 : 6월 10일 (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민주노총 경기본부 회의실(수원역 8번 출구 300m 직진 매산동주민센터 옆 골든프라자 5층)
참가비 : 무료
참가 문의 : 010-8700-4647

서울 남부1지회 공개모임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연사 : 임충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청모병원지부장)
일시 : 6월 11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강남역 모임공간 더스페이스 (강남역 11번 출구 롯데시네마 뒤편)
참가비 : 3,000원
참가 문의 : 010-6503-7858

서울 서부3지회 공개모임

삼성전자서비스, 케이비 비정규직 ... 가짜 사장 전성시대에 맞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연사 : 박설(노동자연대 노동 담당 기자) 등
일시 : 6월 11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신도림 예술 공간 고리
참가비 : 2,500원
참가 문의 : 010-5061-4571

권리 보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시간제 노동자들에게도 각종 복지 혜택과 수당을 지급하고, 전일제 일자리로 전환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비례보호 원칙의 보안을 통해 여러 복지 혜택과 수당 지급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해도,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더 적게 받고 승진은 더 늦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경험을 보면, 아무리 시간제 일자리 보호 규정이 있어도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 층의 대규모 양산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처지를 하향 평준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했다.

하향 평준화

따라서 시간제, 초단시간 일자리 도입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

그리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전일제 일자리를 확충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현재 시간제 노동자들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제 노동자들뿐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조직 노동자들이 함께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반대해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리와 대학에서 노동자 연대를 만나 보십시오

격주 월요일 (다음로 가판은 6월 16일)

서울 건대입구역 4번 출구 19:00~20:00

울산 현대차 4공장 구 정문 건너편 14:30~15:20

인천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오아시스빌딩 앞) 19:30~20:30

건국대(서울) 후문 앞 11:30~12:30

한국외대 인문과학관 앞 12:00~13:00

격주 화요일 (다음로 가판은 6월 17일)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19:00~20:00

서울 혜화역 4번 출구 19:00~20:00

서울 홍대입구역 8번 출구 19:00~20:00

수원 수원역 롯데리아 앞 광장 18:30~19:30

고려대 정경대 후문 16:30~17:30

한신대 오월계단 앞 12:00~12:50

격주 수요일 (다음로 가판은 6월 18일)

서울대병원 동문(혜화역 3번 출구) 8:00~9:00

국민대 법학관 1층 식당 앞 11:30~12:30

이화여대 포스코관 지하 1층 입구 12:00~13:00

부산대(부산) 벡터광장 17:30~18:30

격주 목요일 (다음로 가판은 6월 19일)

울산 성남동 젊음의 거리 중부소방서 옆 19:00~20:00

인하대 학생회관 앞 11:30~12:30

충남대 공대2호관 앞(죽문) 17:30~18:30

격주 금요일 (다음로 가판은 6월 20일)

인천대 컨벤션센터 1층 12:30~13:30

격주 토요일 (다음로 가판은 6월 21일)

대전 둔산동 갤러리아 백화점 건물 앞 13:30~14:30

발행인 : 김민식 편집인 : 김민식 인쇄인 : (주)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 : 서울다08179 (2주2건) 등록연월일 : 2009년 1월 12일
주소 :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 02-777-2792 팩스 : 02-6499-2791
정보 : 02-777-2791 E-Mail : ws@wspaper.org

이렇게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와 노동자 투쟁

세월호 참사는 기업들이 이윤 경쟁을 해야만 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충격적으로 폭로한 사건이었고, 이에 대한 대중적 분노도 광범하다. 박근혜 정부는 속죄양을 만들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 말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이 문제의 파장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다.

이에 대한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의 대응은 다소 아쉽다. 매우 중요했던 운동 초기에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개별화된 시민적 참가를 강요했고, 세월호 참사 대응 국민대책회의 안에서 민주노총측 책임자는 ‘자본이 문제’라는 추상적인 논리를 앞세워,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이 박근혜 퇴진 요구 채택하기를 회피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철도 파업으로 전체 사회운동 안에서 노동운동이 주도성을 회복하고, 민주노총 본부 침탈 이후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박근혜 퇴진 요구를 채택하고 있던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런 대응이 불필요하게 수세적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증폭시켰다. 특히 처음부터 항의 운동에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 최대 위기라는 이 국면에서 개혁주의 세력인 주요 NGO들을 추수해 왔다. 적어도 하루파업이라도 명령하며 박근혜 정부 반대 투쟁을 이끌어야 했는데도 말이다.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가 “노동이 투쟁을 지휘하고 이끌어낸 것이 맞다”고 평가한(민주노총 - 2.25 국민 파업



세월호 참사는 계급 문제다 5월 10일 안산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한 금속노동자들.

교안) 지난 연말 상황처럼 말이다.

민주노총 내 좌파 지도자들은 민주노총 중집에서 중앙 지도부의 수세적 대응을 옳게 문제 삼았다.

하지만 산하 노조의 기층 조합원들을 설득해 사용자들을 겨냥한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을 독려하거나 명령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좌파적 문제 제기는 처음에 민주노총 지도자들의 농성 계획으로, 그다음에 청와대를 향한 행진 제스처로 나타나는데 그쳤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은 소수의 비효과적 행동이 아니라 조합 조직들을 사용자들의 이윤 공격에 동원하는 진정으로 효과적인 투쟁을 이끌어야 한다.

좌파 노동단체들은 대부분 올바르게 세월호 문제에 매우 큰 적극성

을 보였다. 만약 이런 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부문의 경제적 요구에만 관심이 머문다면 그것은 협소한 운동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계급 바깥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바로 계급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주도성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처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항의 운동 내 좌파들은 운동 속에서 박근혜 퇴진 요구가 대세를 장악하고 퇴진 투쟁을 강화해야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생각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는 ‘직접행동’을 강조한다.

박근혜 퇴진 요구는 당연하다. 앞

서 지적했듯이,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 요구를 공식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주요 시민단체들과의 동맹을 중시해, 이 결정으로부터 후퇴해 왔다. 그러므로 민주노총 내 좌파가 박근혜 퇴진 요구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퇴진 요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줄 동력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즉, 정권의 위기를 실질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노동자들의 고유한 계급적 수단과 힘을 동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 노동운동이 사기 저하돼 있을 때는 먼저 거리 시위의 활력이 작업장으로 흘러들어오기를 기대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반 투쟁의

여파 속에서 바로 노동자들이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항의 대열을 주도해 왔다. 이 노동자들이 세월호 참사 항의 분위기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도 싸우도록, 분노를 사용자의 이윤 쪽으로도 돌리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조직 노동자들은 거리 시위에 참가해 항의해야 할 뿐 아니라 노동계급 고유의(즉, 착취에 저항하는) 투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6월 말 총궐기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월 기층 분위기가 뜨거웠을 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2월 25일로 파업 일정을 늦춰 잡았던 문제점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또, 단지 하루 집회를 하는 것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노동계급의 경제적 잠재력을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려면 KBS 노조 파업이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파업처럼 이윤을 공격하는 계급투쟁적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즉,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들은 세월호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민영화, 규제완화, 산업안전, 외주화, 비정규직, 화물 과적 같은 문제들을 놓고 사용자에게 맞서 투쟁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24~28일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7월 상경을 예고하고 있는 건설노조도 6월 총궐기에 맞춰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면 훨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금속노조도 세월호 참사와 통상임금 법개악, 비정규직 문제 등을 결합해 6월에 함께 싸운다면 막강한 힘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 내 좌파 활동가들은 이런 일을 조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들이 박근혜 퇴진 선언을 잇달아 발표하다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정서와 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자들의 대다수가 학생과 교사라는 점 때문에 특히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충격과 슬픔만큼 분노도 크다.

전교조는 5월 15일 1만 6천 명의 교사들이 참가한 정부 규탄 선언을 발표했다. 5월 17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 교사대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와 분노가 대화장을 가득 메웠다.

5월 13일에는 교사 43명이 실명으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선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중징계를 각오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교육부는 즉각, 퇴진 선언 교사들을 색출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위협했다. 많은 교사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구조에는 능장인 정부가 교사 징계에 대해서는 LTE처럼 빠르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퇴진 요구의 정당성을 더 확대하고, 이를 통해 43인 교사에 대한 중징계에 항의하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2차 교사 선언이 조직되기 시작했다. 5월 28일에 80명이 2차

퇴진 선언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1차 선언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교사들의 박근혜 퇴진 요구 선언은 많은 노동자들과 교사들의 심정을 대변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교사 선언에 달린 댓글들은 압도적으로 이 선언들을 지지했다.

특히, 국가에 의해 정치 활동의 자유를 극심하게 제약당하는 교사들이 퇴진 선언을 한다는 것은 많은 노동자들과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주는 정치적 울림이 컸다.

삼성 본관 앞에서 파업 농성을 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교사들의 퇴진 선언에 힘이 난다고 말했다.

박근혜 퇴진 요구의 정당성

일각에서는 박근혜 퇴진 요구가 적절하냐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12월에 정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을 습격한 직후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 요구를 공식 결정했다. 2월 25일 ‘국민총파업’ 때도, 5월 1일 메이데이 때도 박근혜 퇴진이 민주노총의 공식 요구였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박근혜 퇴진 요구의 정당성이 매우 커졌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유족과 많은 사람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박근혜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도 박근혜가 퇴진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들의 박근혜 퇴진 선언은 더 확대돼야 한다. 좋기로는, 전교조 지도부가 퇴진 선언을 하는 것이다.

전교조가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한다면 많은 노동자들에게 투쟁의 영감을 줄 것이다. 1986년 5월에 교사들이 결행한 교육민주화 선언으로 수십 명의 교사들이 구속까지 당했지만, 전두환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에 큰 영감을 줬다. 또,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이 이듬해 전국 교사협의회 결성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989년에 전교조가 창립했다.

전교조 지도부가 퇴진 선언을 하는 것은 또한 정부의 중징계 시도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어 행동이 될 수 있다.

김연오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 참여자

14번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MARXISM

맑시즘

2014

8월 7일(목) ~ 10일(일)

장소: 서울 | 주최: 노동자연대

참가신청·문의 : www.marxism.or.kr | 02-2271-2395 | 010-4909-2026 (문자 가능) | marxism@marxism.or.kr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조명지

이건희의 회복 여부에 온 언론이 관심을 기울이던 때, 삼성 제품을 수리하는 서른네 살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故) 염호석 열사는 유서에 “더 이상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하고 썼다. 지난해 최종범 열사에 이어 벌써 두 명의 노동자가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초일류 기업’ 삼성의 추악한 실체를 낱알이 폭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매년 수십조 원의 이윤을 얻고 삼성전자 사람들이 50억 원대 연봉을 챙기는 동안, 삼성전자 제품을 수리하는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았다. 고(故) 염호석 동지의 3월 월급은 70만 원, 4월 임금은 41만 원밖에 안 됐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사측은 악랄한 탄압을 퍼부었다.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의 입감을 뺏고, 노조 가입률이 높은 센터는 아예 폐업해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심지어 경찰은 폭력을 휘두르며 장례식장에 밀고 들어와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탈취하고는 서둘러 화장시켰다. “노조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해 이곳(정동진)에 뿌려 주세요” 하는 고인의 마지막 유언은 무참히 짓밟혔다.

노동자들은 “세월호에 있는 아이들은 한 달이 지나도록 시신조차 못 찾은 무능한 정부가 노동자의 시신은 신속하게 탈취”했다며 “구조는 등신, 탄압은 귀신”이라고 정부를 규탄했다.

시신 탈취

경찰은 시신을 돌려 달라는 고인의 생모에게까지 최후약을 뿌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를 사과하기는커녕 항의하는 위영일 지회장을 포함해 노조 간부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의 본질이 가진 자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주류 언론도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초일류 기업’ 삼성의 추악한 실체를 낱알이 폭로하고 있다.

입을 보여 줬다. 이들은 ‘이승엽 홀런에 이견희가 번쩍 눈을 떴다’는 쓰레기 같은 소식만 앞다퉈 보도했다. 반면 삼성의 노동 탄압에 맞서 자결한 노동자의 소식은 외면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온갖 탄압과 동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삼성에 맞서 당당히 투쟁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5월 19일부터 전면 파업을 하고 삼성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아스팔트 위에서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청하면서도 노동자들은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열사의 뜻을 지키는 것이라며 투지를 높이고 있다.

“투쟁해야 교섭도 됩니다”

저들은 고인의 죽음으로 투쟁이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온갖 패악질을 하며 시신을 탈취해 장례를 서둘렀다.

노동자들이 온갖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자 최근 사측은 교섭을 제안했다. 삼성은 이재용으로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3대 세습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더 키울까 우려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적 곤경에 처해 있는 박근혜 정부도 이 투쟁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삼성측은 비열하게도, 삼성 본사 앞 분향소와 농성장을 철수해야 협상할 수 있다고 노동자들을 능멸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사측을 규탄하며 본사 앞 농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오히려 더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



“종범아 호석이 너희들의 꿈 우리가 이룰게” 동료의 영정 사진을 들고 투쟁하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대열에 합류하며 기세를 높였다.

곽형수 부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염호석 열사는 죽어서도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다 죽어도 분향소마저 옮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옮기라는 전제 조건은 교섭하지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지난해 사측이 최종범 열사 투쟁 때 약속했던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또, 4월에 충분한 투쟁의 뒷받침 없이 교섭에만 집중한 것이 “패착이었다”고 반성한다.

지난 10개월간 온 힘을 다해 삼성과 맞서 싸웠던 노동자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투쟁을 이어가는 것만이 제대로 된 교섭도 만들 수 있다”(통영 조합원)는 것을 알고 있다.

광안의 한 노동자는 힘주어 말했다. “(농성장 철수는) 재고의 여지도 없는

일이었어요. 사실 최종범 열사 투쟁도 아쉽게 제대로 끝내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삼성에게 확실한 걸 받아야 해요.”

노동자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은 곧 입증됐다.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당분간 교섭은 없을 것처럼 노동자들을 협박하던 사측은 3일 만에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서겠다고 꼬리를 내렸다.

전진

노동자들은 한데 모여 파업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경험 속에서 배우고 있다. “단결과 연대의 소중함도 알게 됐다”고 말한다.

“노동조합 활동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우리 동지들이예요.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함께하잖아요.”

“숨 막힐 정도의 탄압도 있었고, 장례식장에서 경찰이 달려들 때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섭지 않아요. 모두 한목소리를 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함께 투쟁하는 선배들이, 동지들이 자랑스럽습니다.”(영등포 조합원)

또, 노동자들은 그간의 투쟁으로 얻은 것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노조 설립 전에 싸워 장거리 수당을 받아냈고 이때 노동자들에게 신뢰를 얻었어요. 노조 결성 이후 연차수당 등 사장이 때 먹은 돈 1억 5천만 원도 돌려받았죠. 노조가 싸우면 성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줬고 조직력이 탄탄해졌어요.”(김해 조합원)

삼성 무노조 경영에 파열구를 내며 전진하는 노동자들은 삼성이 결코 무적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6월 파업을 예고한 케이블방송 노동자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소속 3개 지부(씨앤엠 정규직·비정규직, 티브로드 비정규직)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6월 공동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정규직화, 매각 시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TV 시청이 늘어나는 시기에 쟁의를 벌여 타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씨앤엠과 티브로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파업·투쟁을 벌여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처지는 여전히 열악하다.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이중고를 없애려면 ‘생활이 가능한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왜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하는가.

또 케이블방송 기업주들은 영

업·설치·수리를 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하고 있다. 간접고용은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진짜 사장’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고용 형태다. 이 때문에 케이블방송 비정규직은 원청의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청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단계 하도급(원청-협력업체-재하도급업체)을 암암리에 확대하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이 증가하는 이유는 케이블방송 기업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기 때문이다. 기업주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노동자들에게 영업을 강요했다. 노동자들이 노조로 뭉쳐 이를 거부하자 외주업체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일부 협력업체 사장들은 “파업하면 외주업체에 일을 넘길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재하도급 확대는 더 열악한 저질 일자

리를 늘린다는 점에서도 중단돼야 마땅하다.

매각을 앞둔 씨앤엠 노동자들에게 고용보장 요구는 절실하다. 씨앤엠 사측은 고용보장을 약속하면 매각 대금이 깎인다고, 보장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무리하게 가입자를 늘리고, 구조조정해 매각 대금을 높일 생각만 하고 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사측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밀렸던 것을 만회하려

삼성 재벌의 간접고용에 맞선 투쟁

연대와 지지가 중요하다

성지현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황상기 씨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삼성에 노조가 있었다면 내 딸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지금 삼성 노동자들이야말로 삼성 재벌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세력임을 보여 주고 있다. 삼성 계열사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지켜보고 있다.

이 투쟁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밝히 드러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대폭 늘어났다. 현재 전체 노동자 8명 중 1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2백만 명 내외).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이건희·정몽구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사내하도급법을 통과시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 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는 비슷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크게 고무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이 결성된 지 1년이 안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 투쟁의 승리는 삼성 재벌에 맞서는 투쟁과 간접고용의 열악한 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에서 큰 진전을 뜻할 것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의 지원과 연대가 중요한 이유다.

다음 아고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세계적 기업이라는 삼성은 이런 일 해결하지 않고서 어디 일류 기업이라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삼성 제품을 쓴 이유는 AS 때문인데 이처럼 서비스맨들을 대하다니요.”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밥 한 끼와 양말

5월 28일 ‘삼성바로잡기’가 개최한 “힘내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연대한마당”에는 진보 정당들과 많은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이 참가해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양말, 수건, 쌍화탕, 파스, 음식, 모금 등을 전달했다. 노동자들은 “연대 덕분에 힘이 납니다”, “투쟁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금속노조는 열사대책위를 구성하고, 5월 24일과 30일 결의대회를 열고, 도심 행진을 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모금도 결정했다. 이런 연대는 현장에서 기층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실질적인 연대로 보완돼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더 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박살내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신다면 살아서,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국제노총이 뽑은 “세계 최악의 CEO”, 이진희

국제노총(ITUC) 세계총회는 한국을 노동감시국으로 분류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삼성 자본을 규탄하는 국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삼성 회장 이진희는 올해 국제노총이 뽑은 ‘세계 최악의 CEO’ 후보 9명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브라질 금속연맹 위원장은 “브라질 아마존 주 삼성공장에 노동자 7천 명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 검찰은 [삼성이 노동자들에게] 잔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강도를 높여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노총 위원장은 이렇게 폭로했다. “브카시 공단 내 삼성 공장

에 노동자 2천 명이 일하고 있다. 그들이 인도네시아노총 산하 금속연맹에 집단 가입하자, 삼성은 이들을 일시에 해고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삼성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평화적 파업이었음에도 마피아 1천 명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파업을 진압했다.”

프랑스 최대 노총인 노동조합총연맹(CGT)은 삼성을 ‘허위 광고’로 고발했다. CGT 국제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삼성은 프랑스에서 ‘젊고 혁신적이고 깨끗한 회사’라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 중국공장에서 벌어지는 아동노동,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을 봤을 때는 거짓말이다.”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 활동 보장, 노동시간 단축, 불법적 임금 차감 금지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했다. 조합원은 벌써 2천여 명에 이른다. 노동조합 건설 이후 SK와 LG 사측은 조합원 불이익 주기, 위장 폐업과 ‘소사장제’로 업체 분할, 개별

더 악랄하게 굴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파업·투쟁으로 조직과 의식을 강화했고, 자신감과 사기도 높다.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높다는 점도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점이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가 KBS 파업 등 노동자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은 곧이어 벌어질 SK브로드밴드와

이종란 반올림 상임 활동가 인터뷰

“삼성의 사과와 직접 교섭 인정은 끈질긴 투쟁과 세월호 참사 분노 때문”

5월 14일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이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반도체 산재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삼성의 공개·공식 사과는 처음이다. 이후 5월 28일 5개월 만에 삼성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간의 교섭이 재개됐다.

반올림 교섭단은 가슴에 검은 리본과 노란 리본을 달고 교섭에 들어갔다. 반올림 교섭단은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은 노동조합 탄압, 간접고용에 억눌린 노동자들의 고통과 세월호 참사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고통과 같다” 하고 말했다.

반올림의 상임 활동가 이종란 노무사는 이번 삼성과의 교섭에서 반올림 교섭단 중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노무사는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한 주인공 모델이기도 하다.

“지나해 초부터 삼성이 반도체 산재 피해자 가족과 교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내용으로 협상할지 정하는 데만 8개월이 걸렸습니다.

본격적으로 협상하기로 한 게 지난해 12월이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교섭이 열리지 않다가, 이번에 5개월 만에 다시 교섭을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반올림을 교섭 주체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면서 ‘제3자 중재기구’를 고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3자 중재기구’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삼성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를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교섭에서 삼성은 반올림을

사실상 협상 주체로 인정했습니다. 일단 양 당사자가 성실하게 협상하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직접 교섭을 이끌어 낸 의미가 있죠.

다만, 우리가 5개월 전에 사과·보상·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 요구안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 삼성이 안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음 협상에 우리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가져오길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문의 쇄도

삼성이 직접 사과하고 교섭에 나선 것은, 7년 동안 한마음으로 [삼성교과] 싸우고 이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던 산재 피해자, 가족, 반올림의 활동 덕분에입니다.

“우리는 노동자 안전과 노조 설립 인정도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번 교섭에서 그동안 삼성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한 것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학물질 정보 공개, 독립적인 연구진의 종합진단 실시 등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문도 모른 채 죽어 가고 젊은 나이에 암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삼성이 충분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삼성뿐 아니라 반도체 전자 산업의 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좀 더 쉽게 산재를 인정받도록 하는 싸움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기업을 규제하는 싸움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성이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처음 시작한 황유미 씨의 아버님이 “삼성에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내 딸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한 적이 있어요.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말하면서 노동자들을 소모품이나 기계처럼 취급해 왔고,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직업병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노동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삼성에서 처음으로 대중적 노조를

저희가 7년간 끈질기게 싸워서, 이제 국내 언론뿐 아니라 외신에서도 취재가 정말 많이 와요.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덕분에 이 문제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이런 점이 삼성에게 압력으로 작용했던 듯합니다.

또 무엇보다 실제로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삼성도 이 문제를 이대로 두면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는 듯합니다. 마냥 책임 회피만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게다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이윤을 위해 생명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삼성이 이런 사람들의 정서도 고려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사과 이후에 직업병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업병으로 의심하지 못했거나, 의심하더라도 보상 가능성에 대해 절망적이었던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백혈병, 뇌종양, 심부전증, 각종 희귀질환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만들었습니다. 삼성은 지금 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엄청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이 승리하고 노동조합을 인정받는다면, 삼성의 전체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삼성에서도 노동조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쟁이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정말 고마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올림의 싸움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긴밀히 연결돼 있고, 따라서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이 승리하도록 우리도 열심히 연대할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성지현



유병규

4월 12일 케이블방송 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장호중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 뒤에도 줄줄이 이어지는 안전사고들은 이 비극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 줬다.

부패한 관료들과 기업주들은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들의 계산에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과 안전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이런 논리를 의료에도 적

용하려 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의료가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다.

그러나 박근혜는 병원, 민간보험사, 의료기기 회사, 제약회사 등이 더 많은 이윤을 벌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데 골몰해 있다.

원격 의료 허용, 부대사업 허용 범위 대폭 확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신약, 의료기기

심사 간소화 등.

반대로 노동계급에게 이런 규제들은 의료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안전 장치다. 자유 시장의 신화와 달리 평범한 사람들은 암·교통사고·당뇨병 등을 앓으면서 병원, 제약회사 등과 가격 흥정을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박근혜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펄펄 댕다. 이미 한국의 의료기관이 대부분 민간 소유인데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공급(병원)이 사적 자본이나 개인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얼핏 보면 민영화라는 표현이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영화는 단지 소유권 이전

만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늘날 민영화 과정에서 법적 소유권 자체는 부차적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수서발 KTX 자회사의 경우 모든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와 코레일이 갖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 회사의 운영권을 민간자본에 팔아 민영화 효과를 내려 한다. 거꾸로 한국 통신을 민영화한 KTN나 포항제철을 민영화한 포스코는 여전히 사실상 정부가

경영진을 임명한다. 그 산업이 전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나 교육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경우는 법적 소유권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있을지라도 대부분 정부 규제에 일정한 공공성을 보장한다.

그런데 이런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사라져 공공성이 약화되면 소유나 운영이 민간에 이전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건강보험 기능이 크게 약화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에는 손대지 않으므로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건강보험 제도는 민간 병원과 제약회사 등의 안전성과 폭리를 규제하는 구실을 한다. 사실상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보험 적용과 심사를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는 구실도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건강보험의 이런 기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다.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 전체 병원비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환자들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실료, 의료 기기, 약값 등이 포함된다. 그래

서 지금도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보장성)은 62~64퍼센트밖에 안 된다. 병원비에 포함되지도 않는 각종 약값, 의료 기구, 가족들의 식비, 숙박료 등을 고려하면 실제 보장성은 더 낮아진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허용하려 하는 ‘부대사업’에는 이런 부분이 거의 모두 포함된다. “숙박업, 여행업,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 등은 사실상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호텔형 병실을 허용하는 것이다.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의료기기 등 구매,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료용구 개발·임대·판매, 의료기기 개발” 등은 약값과 의료기기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는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병원은 부대사업으로 번 돈을 병원 운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영리 자회사는 이렇게 번 돈을 주주들에 배당하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들의 수익을 위해 병원비는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이다.

그 결과 보장성이 낮아지면 건강보험제도가 공격받기 쉬워진다. 예컨대 전체 진료비의 20퍼센트밖에 보장해 주지 않는 보험에 강제로 가입시켜 비싼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누가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반면 민간보험사들은 그만큼 시장이 넓어졌다고 반길 것이다.

원격 의료는 안전을 위협한다

의료 민영화는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앞서 언급한 부대사업들은 실제로 병실, 약, 의료 기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사실상 ‘선택’하기 어렵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들도 이 점 때문에 큰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건강보험의 규제 대상 밖으로 빼내면, 그 안전성을 검증하기 어려워진다.

한술 더 떠 박근혜 정부는 신약과 신의료기술 등의 심사를 ‘간소화’하려 한다. 이는 사실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원격 의료를 허용하면 삼성전자, SK텔레콤, 서울아산병원, 서

울삼성병원 등 재벌 기업들은 수익을 올릴 것이다. 그러나 원격 의료는 안전성은 물론이고 치료 효과도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 기업이 참여한 시범사업에서도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오는 6월부터 원격 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6개월로 약속한 시범사업 기간도 단축할 듯하다. 군인 대상 시범사업 계획도 밝혔다.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시범사업과 관계 없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겼다.

원격 의료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료, 통신비, 기기 임대료, 주택 임대료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질 것이다.

비용은 노동자들에게?

병원들은 비보험 진료를 늘리는 한편, 건강보험 수가 인상도 요구할 것이다. 수익성이 좋은 부대사업을 자회사에 맡기면 병원 자체는 그만큼 수익성이 낮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정부는 의사들 일부의 반발을 달래려고 수가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료 인상은 거의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물론 노동자들의 건강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주들도 보험료 인상에 반대한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더 부담을 지워 이런 반발을 무마하려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노동자들의 퇴직금과 연금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 피부양자 대상도 축소해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려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이 제작한 동영상 내용을 반박하는 영상을 제작하려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작 협조를 요청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 민영화를 홍보하려 한 것이다.

더 나아가 ‘고용·복지분야기능점검 추진방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는 체납 사회보험료 추징 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넘기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채권 추심 전문 업체”에 넘기겠다는 얘기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예고하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은 5월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병원과 거리, 대학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울에서는 명동, 신촌, 대학로 등 11개 지역에서 대규모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2주 동안 농성이 벌어졌다. 5월 24일에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고 의료·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부산, 인천, 울산, 대전, 대구, 청주, 일산, 포항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서명 운동과 1인 시위 등이 벌어졌다. 그

결과 지난달까지 30만 명을 채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이 한 달 만에 4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대책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대책위”(서울대책위)에는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연세의료원 노조 등 보건의료 부문 노동조합들이 대거 참여한다.

서울대책위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무원노조 서

울본부, 진보정당들,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등도 참가한다.

서울대책위는 오는 6월 11일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40만 명

서울 시내 주요 병원들을 중심으로 구별 대책위로 추진되고 있다. 이미 대책위가 만들어진 성동구를 비롯해 10여 곳에서는 6월에도 공동 홍보활동

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보건의료 부문 노동조합들이 6월 말 의료 민영화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더 큰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에 맞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광범한 단체들이 참가하는 지역대책위 활동이 결합되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에 동참하자.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 인력감축이 낳은 비극

이정원

5월 24일 경기도 오봉역에서 수송 업무를 하던 철도 노동자 차석호 씨가 ‘입환’ 업무 도중에 열차 사이에 끼어 숨지는 비극적 사고가 일어났다.

입환 작업은 한 량에 40톤이 넘는 열차 사이에 들어가 열차를 붙였다 떼다 하는 일이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번처럼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수송원 노동자들은 이 작업이 “두 시간만 해도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고된 일”이라고도 말한다.

그런데 차석호 씨는 사고 당일 30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일했다. 이는 근로기준법도 위반한 초장시간 노동이다.

수송원 노동자들이 이런 끔찍한 조건에 내몰린 이유는 바로 극심한 인력 부족 때문이다. 신규사업이 늘어났는데도 2005년 3만 1천여 명이던 인력은 오히려 2013년 2만 8천여 명으로 줄었다. 해마다 수백 명 넘게 퇴직해도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업무를 외주화한 것이다.

고(故) 차석호 씨가 속한 역무직 업무는 특히 사측의 공격이 극심했다. 철도공사는 역 운영 효율화라는 명목



5월 29일 국민 철도·국민 건강 서울 집회 발대식

으로 2007~11년에 노동자 2천8백여 명을 줄였다. 이런 구조조정은 계속돼, 2012년에는 역 2백18곳이 무인화됐다. 이는 전체 역의 33퍼센트나 된다. 역 폐쇄도 잇따랐다.

오봉역과 같은 화물역들은 ‘거점화’로 인력 감축과 전환배치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부

쩍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철도공사가 화물열차 출발검수 업무까지 가중시켜 일이 더 고됐다. 사측은 차량 정비 인력을 줄이려고 이 업무를 수송원들에게 떠넘겼다. 고인은 이 때문에 ‘일이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했다고 한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수익성만을 위

해 무자비하게 노동자들을 쥐어짜 온 인력 감축, 노동강도 강화, 구조조정 에 있다. 이런 구조조정을 막지 않으면 비극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철도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맞서 저항해 왔다. 이 덕분에 사측의 공격을 완화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었다.

올해 3월 서울차량 노동자들이 화물열차 출발검수 이관에 반대해 싸운 것도 그 투쟁의 일부다. 당시 노동자들은 출발검수 이관의 위험성을 경고했는데, 그 말이 1백 퍼센트 옳았다. 실제 이 조치 이후 열차 고장도 급증했다.

하현아 서울차량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당시 사측은 ‘차량 정비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예상되는 명백한 위험을 외면했다. 그리고 지금 정당한 투쟁을 벌인 조합원들을 해고하겠다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는 최근 “안전관리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까지 탄압하는 철도공사는 안전을 말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의 공기업 ‘정상화’가 철도 안전을 위협한다

철도 현장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사측은 기관사들의 격렬한 저항을 무릅쓰고 중앙선 1인 승무를 강행했다. 이제는 화물열차에서마저 1인 승무를 추진하고 있다. 16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철도 공사는 정비 주기를 대폭 늘리고 있다. 심지어 정비를 생략하라는 지시까지 내리고 있다. 역 무인화와 외주화도 더 늘리려 한다.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사측은 7월에 또다시 강제전출도 추진하려 한다. 기관사들의 경우 1백 명이라는 규모까지 제시됐다. 오랫동안 일한 베테랑 노동자들을 타지로 몰아 ‘초짜’로 강등시키는 강제전출 역시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4월에 강제전출된 노동자들은 달라진 환경과 노동조건 속에서 숙련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세월호 참사 이후 한 달 만에 박근혜는 다시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공기업 ‘정상화’ 추진 실적을 달성하라는 것이다.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는 공공서비스를 축소시켜 철도 안전을 위협한다. 그리고 그 ‘정상화’의 종착지는 바로 민영화다.

따라서 철도 노동자들이 이런 위험한 질주를 막기 위해 부단히 투쟁하는 것은 정당하다. 다가오는 7월 강제전출과 각 직종에서 벌어질 구조조정에 맞서 다시금 단결해 싸울 태세를 갖추자. 그것이야말로 노동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철도 노동자 징계·해고 즉각 중단하라

최근 국제노총(ITUC)은 세계 1백39개 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라오스, 잠비아, 중국 등과 함께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를 뜻한다.

국제노총이 한국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근거 중 하나가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량 해고한 것이

다. 지난해 파업으로 노동자 1백30명이 해고됐다. 그중 31명만이 최근 재심을 거쳐 복직됐다. 파업 전에 해고된 노동자까지 합하면 그 수는 1백89명에 이른다.

지금도 정부와 철도공사는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천여 명에 대해 5월 말부터 징계에 착수했다. 2월 25일 경고파업을 이유로 1백30여 명

도 중징계하려 한다. 또 올해 2~3월에 있었던 중앙선 1인승무 저지 투쟁, 서울차량지부의 화물열차 출발검수 이관 저지 투쟁과 강제전출 저지를 위한 전면 작업 거부, 수색차량사업소 소장 항의 방문 등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한 중징계 철차에 착수했다.

사측은 6월 말 경영 ‘정상화’ 방안 이행 실적 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윤을 더 쥐어짜내기 위해 조합원들과 활동

가들을 징계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보여 주듯, 민영화, 규제 완화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와 강제전출·구조조정에 반대해 투쟁한 것은 대형 참사를 방지하고 공공서비스 후퇴를 막기 위한 것이고 정당했다.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와 노조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영화평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생생하게 전하는 7개국 민영화 탐방기

민영화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가 곧 개봉한다. 이 영화는 〈우리 학교〉, 〈위낭소리〉의 고영재 감독이 총괄 제작자를 맡았고, 많은 사람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졌다.

〈블랙딜〉은 7개 나라를 발로 뛰며 민영화의 폐해를 생생하게 담았다.

철도 민영화 이후 매년 3~5퍼센트 씩 요금인 인상된 영국, 기차역이 없어지고 노선이 폐지돼 마을 공동체까지 파괴된 일본, 전기가 너무 자주 끊겨 전기를 빨리 복구해 달라는 시위가 일상이 된 아르헨티나, 노동자들이 거의 6개월을 포박 일해야 겨우 낼 수 있을 만큼 등록금이 비싼 칠레…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진행형인 지금, 〈블랙딜〉은 민영화가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 준다.



영국에서는 철도 민영화 이후 열차 추돌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수백 명이 죽고 다쳤다. 회사가 돈을 아끼려고 철로 안전장치를 꺼 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일본에서도 열차 사고가 잇따랐다. 열차 사고를 낸 회사의 사훈

은 “돈 버는 게 제일”이란단.

아르헨티나의 현실은 민영화의 종착역이라 할 만하다. 아르헨티나는 일본에서 30~35년을 쓴 노후한 열차를 수입해 운행한다. 창문은 닫히지도 않는다. 출퇴근 시간에 콩나물 시루처럼 사람들이 가득 차면 문을 닫지도 않고 열차를 운행한다.

세월호 참사 연상케 함

2012년 아르헨티나에서 51명이 죽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22살이던 루카스도 이때 희생됐다. 정부는 열차 안에 있던 시신을 사흘이 지나서야 발견했다. “비극이 일어나게 한 것도 모자라 찾지도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루카스의 상황은 정부가 우리를 버렸다는 사실의 증거가 된 셈이죠.” 루카스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세월호 사건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연금 민영화는 민영화가 한 사람의 노후를 망쳐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칠레의 85세 호세 할아버지는 45년을 꾸준히 일했고 연금을 부었다. 그러나 은퇴 후 받은 돈은 우리 돈으로 22만 원밖에 되지 않았다. 피노체트 독재정권이 국민연금을 민영화했기 때문이다. 민간연금 회사들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받은 돈의 60퍼센트를 광고비로 썼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금수급자들에게 돌아왔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민영화로 효율과 발전을 낳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영화는 민영화의 배후에 언제나 검은 거래, ‘블랙딜’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 세계적인 물 기업 수위즈사는 프랑스의 한 시장에게 약 28억 6천만 원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사실이 들뜬다. 아르헨티나에서도 항공, 석유, 수도, 은행, 통신, 가스, 방송 등을 민영화하는 과정

에서 부패가 드러났다.

칠레의 한 대학생은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한국에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 “한국인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제가 한국인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한국에서 민영화 가 되지 않도록 싸우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만약 민영화가 된다면 우리가 얻는 것이라고는 사회 불평등뿐입니다.”

〈블랙딜〉은 7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시사회와 공동체 상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민영화 문제를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

정선영

공동체 상영 방법

공식 웹사이트 <http://blackdeal.kr>에서 신청
문의: (주)인디플러그, 070-7019-0371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낳을 공공기관 ‘정상화’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로 국가 기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증폭하자 이를 이용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려 한다. 담화문을 발표하자마자, 세월호 참사로 미웠던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 워크숍’을 다시 열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상화’는 참사를 막을 ‘국가 개조’이기는커녕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낳을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워크숍에서는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돈벌이에 눈이 먼 규제 완화로 2백 명 넘는 사람들이 바닷속에서 죽어 갔는데도 말이다.

‘정상화’의 핵심 내용은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라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주로 ‘사업 조정’과 자산 매각으로 부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예정된 공공사업을 취소·연기하거나, 사기업을 끌어들이거나, 공공기관의 재산을 사기업에 팔아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윤과 경쟁의 논리를 강화해 안전을 뒷전에 두게 만들 것이다.

최근 정부는 건설 안전 감리(공사가 설계도나 서류 내용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사하는 것) 기구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민간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건설관리공사는 1990년대 초 팔당대교 붕괴 등 대형 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부실공사를 막으려고 만든 공공기관이다.

그런데 감리회사가 민영화되면 이윤 추구에 매달리는 경향 때문에 안전감독이 더 부실해질 수 있다. 선박업체와 유착한 민간 기관들이 세월호 안전감독을 제대로 못했던 것처럼 말이다.

정부는 부채를 삭감하기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도 공격하고 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부채 증가 중 70퍼센트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는데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조건 악화는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박근혜는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했지만, ‘정상화’ 계획에는 ‘낙하산’ 인사 방지책은 전혀 없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조사를 보면, 주요 공기업의 기관장·감사의 50퍼센트가량이 정부 관료 출신의 ‘관피아’다.

‘돈보다 공공성’을 위한 투쟁

정부는 단협 개악을 타결하지 않으면 내년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개악에 먼저 합의하는 기관에는 성과급을 주겠다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공동투쟁대오를 분열시키려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그동안 얻어낸 복리후생제도들을 일회성 성과급과 맞바꾸는 게 손해라는 걸 모르지 않는다. IMF 위기 때 공



8월 말에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공동 파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월 22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공기관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퇴직금누진제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등을 양보하는 대신 성과급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제도의 폐지가 손해라는 게 명백해졌다.

정부가 정상화 추진의 고삐를 조이자,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다시 항의를 시작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앞장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공공성을 훼손할 ‘정상화’에 반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8월 말에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공동 파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를 단일 의제로 하는 ‘노사정대표자 회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정상화’를 강경하게 추진하려는 것을 보면, 교섭을 우선해서는 정부의 양보를 얻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민주노총 본부 침탈 이후 정부는 양대노총 모두와 최악의 관계에 있다.

노동교섭은 투쟁의 결과물일 때 그 내용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6월 총궐기에 함께 하고, 예고한 ‘정상화’ 반대 파업을 비롯한 투쟁을 조직하는 데 중심을 뒀다 한다.

최미진

고용·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30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폭로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진 추진방안’을 보면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다. 실업 급여 등 현금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고, 일을 해야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30개 공공기관의 업무 중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해 ‘고용복지서비스 공단’으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실업기금 지출을 줄이려고 이런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듯하다. 2004년 1조 5천8백44억 원이던 실업급여 지출은 2012년 4조 3천8백7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실업기금 지출이 늘어난 것은 경제 위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등 기업주들이 부담해야 할 돈도 실업기금에서 가져다 썼다.

그러나 실업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일조차 더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 관련 공공기관도 통합할 계획이다.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2조 원 줄이겠다고 한다.

소득이 너무 적어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추정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기겠다고 한다. 이들은 훨씬 가혹하게 체납자들의 소득을 압류할 것이다.

통합을 통해 인력을 줄이겠다고며 건강보험공단 노동자 한 명이 하는 일이 대만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을 대폭 감원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갈 것이다. 대규모 인력 감축은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도 일반 진료 기능을 사실상 없애려 한다.

또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을 위해 생명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의료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대폭 완화·생략한다.

복지 삭감과 노동자 해고, 공공서비스 축소를 낳을 이 악랄한 계획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장호중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약 먹튀 진정한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를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하반기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박근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은 일찌감치 사기라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로는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직화였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한 비정규직”에

불과하다. 지자체 무기계약직의 임금은 정규직(지방 공무원) 임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고용 안정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그것도 1백 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겨우 6만 5천 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정부는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 대다수는 아예 처음부터 제외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뻔뻔하게 ‘2013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이 애초 목표치를 넘겼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위원회’의 최근 조사를 보면, 지난 4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도리어 늘어났다. 2010년에 15.5퍼센트였던 16개 광역시·도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4년 4월에는 17.6퍼센트로 증가했다.

무엇보다도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계속 늘어났다. 간접고용 노동자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

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게다가 공공부문에서는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에서도 간접고용이 횡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인천공항 소방대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간접고용이다. 이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나도 문고리 하나 맘대로 못 부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정한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과

차별 없는 공무원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몇 년을 일해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호봉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한다.

또, 정부 대책에서 아예 빠져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고, 실제로 “먹고살 수 있는” 생활 임금을 지급하라고도 요구한다.

이러한 법제도 개선안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소은화

공무원연금 개악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칼을 빼려 한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조합원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공격하려 한다. 한 언론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외부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개인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징계 운운하며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불고 있는 흑독한 칼바람”이란 표현이 과도한 것이 아니다.

가장 강력한 칼바람은 공무원연금 개악이다. “지급액 20퍼센트 삭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1세로 낮추고 유족연금도 삭감”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에서 “희망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공무원연금 주관 부서인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보도가 나올 때마다 ‘결정된 바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아니 땀 굴뚝에 연기날 리 없다.’ 이미 정부는 비공개 민간 자문기구를 구성했다고 한다. 여기서 여러 개악안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다.

20퍼센트 삭감

그래서 그동안 흘러나온 이런저런 개악안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한다. ‘지급액 20퍼센트 삭감’만 해도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2억 원이 넘는 노후 소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개악안이다. 내는 돈을 더 늘리고, 수급 연령을 한 살 늦추고, 유족연금을 낮춘다면 삭감액은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말 그대로 ‘가장 강력한 개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는 의도는 단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후 소득 축소에만 있지 않다. ‘국민정서



연금을 하향 평준화 하려는 정부의 공격에 맞선 투쟁이 건설되고 있다 5월 29일 공적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투쟁본부 출범 기자회견.

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 시비, 공무원들의 고액 임금 논란 제기 등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미래의 ‘재정 안정화’ 운운하는 것도 공공기관 ‘정상화’가 노리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즉, 공공부문 지출을 줄여 재정 적자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요컨대,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속에서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복지·노동조건을 희생양 삼으려 한다. 이는 민간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도 탄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렛대 삼아 또다시 국민연금 개악을 시도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저지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이익을 사수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무원연금 지키기는 “공적연금(국민연금) 지키기”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과 조직에 있다. 최근 정부가 법을 바꿔 공무원연금법 개정 과정에서 공무원노조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이 때문이다. 대표적 개악론자인 윤석명도 공무원연금 “개혁 주체는 제3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조차 동의하지 않는 “개혁”은 있을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법 개정 논의와 강해질 여론몰이에 맞서 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를 모아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6월 28일로 예정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조합원 결의대회는 무척 중요하다. 대규모 대중집회를 통해 우리 쪽 사기를 높여야 한다.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큰 단결도 필요하다. 역대 최대 규모로 ‘공적연금 개악저지 공동 투쟁본부’가 구성된 것은 좋은 출발이다.

공무원연금만 내세우지 않고 ‘공적연금’을 모두 지키겠다고 나선 것도 잘한 일이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이 “공무원만의 투쟁이 아니라 … 공적연금 [개악]의 위협을 받는 국민들을 지키는 투쟁”이라는 주장한 것은 옳다.

세월호 정국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켰다. 이는 우리의 투쟁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를 더 몰아붙이면 사회 전체의 세력관계도 우리에게 유리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노조는 세월호 참사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에 초점을 맞춘 시국선언 등 정치적 행동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하려는 시도에 효과적으로 맞받아칠 수 있을 것이다.

사측의 합의 반복과 근태관리 강화에 맞서

다시 잔업 거부를 시작한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은 5월 초까지 잔업·특근을 거부하며 두 달 동안 싸웠다. 사측이 근태관리 강화, 각종 합의서 무시, 징계 남발 등을 했기 때문이다. 버스부 노동자들은 합의서 위반에 반발해 5일간 생산을 완전히 마비시키기도 했다.

이에 압박을 받은 사측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현장통제 중단을 약속했다. 5월 12일 사측과 전주공장위원회가 조인한 합의문에는 “회사는 현장탄압 하지 않는다”, “각종 합의서 및 작업 재개표준서를 준수한다” 등이 포함됐다. 손배·가압류와 평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철회됐고, 고소·고발 인원도 축소됐다.

그러나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측은 노동자들의 뒤봉수를 쳤다. 복귀 첫날부터 관리자들은 현장



현장을 옥죄는 사측에 분노한 노동자들 4월 잔업 거부 투쟁 집회.

을 돌며 잔업시간에 노동자들을 감시·통제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해 부서별로, 작업반별로 잔업이나 특근을 중단하기도 했다.

버스부 한 작업반에선 또 안전사고

가 발생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처럼,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이윤을 따질 게 아니라, 그 즉시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실제로 전주공장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라인

가동을 중단하고 대책 설명회를 진행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노사 합의(작업재개표준서)가 있다.

5월 12일 사측은 작업재개표준서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했다. 노동자들은 9시간 동안 작업을 거부하며 라인 가동을 멈춰 세웠다. 결국 사측은 설명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장통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현장탄압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근태관리 중단은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버스부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잔업시간에 반장들이 두 차례나 통로를 돌며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지 일일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움마저 듭니다.

“조합원들은 사측의 합의 반복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두 달 동안 잔업·특근을 거부해 임금 손실이 있어 이를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당이 깎여도 사측에 확실하게 힘을 보여 줘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전주공장위원회는 5월 26일부터 다시 ‘현장통제 중단’을 내걸고 전 공장에서 무기한 잔업 거부를 시작했다. 두 달여간의 수당 삭감에도 다시 투쟁이 재개된 것을 보면 노동자들의 투지도 낮지 않은 듯하다.

5월 14일 열린 현대차지부 대의원 대회에서 전주공장의 한 대의원은 “다시 사측의 압박이 시작되면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전주공장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허수영

유럽의회 선거

극심한 경제 위기가 낳은 충격적 결과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경제 위기가 어찌나 오랫동안 이어지는지 그 와중에 [5년에 한 번씩 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벌써 두 차례 치러졌다. 이번 선거 결과를 말할 때 경제 위기가 드리운 그늘을 빼놓을 수 없다.

유럽연합 지배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2009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이전처럼 행동하려 할 것이다. 세 주류 세력(중도 우파, 중도 좌파, 자유주의 세력)은 여전히 유럽의회의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현재 상황을 유지하려 애쓴다.

그러나 이는 거짓된 자기만족일 뿐이다.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 통합 과정 전반을 이끌어 왔다. 그런데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파시스트인 국민전선이 투표자 넷 중 한 명의 표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중도 좌파인] 사회당은 3위로 밀려났다.

그리스는 트로이카(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가 강요한 긴축 정책의 속죄양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1위를 기록했다. 집권당인 중도 우파 신민당은 2위로 밀렸고, 노골적인 나치 조직인 황금새벽당은 10퍼센트 가까이 득표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유럽 전체에서 다음 세 가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신자유주의를 추진한 기성 정당들에 대한 거부, 긴축, 이주민에 반대하는 인종차별.

그러나 프랑스와 그리스의 선거 결과를 대조해 보면, 이런 쟁점들이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 선거 수혜자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중해 연안 나라들은 긴축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곳들이다. 이 나라들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극우 정당들이 아니다. 예컨대, 스페인에서는 좌파연합(IU)과 녹색당의 선거동맹이 10퍼센트를 득표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진 출처 | Luc Delabonde

프랑스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한 파시스트 르펜과 국민전선 지지자들.

포데모스가 8퍼센트 득표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4위를 차지한 것이다. 포데모스는 이번 선거를 불과 넉 달 앞두고 결성된 정당이다. 2011년 5월 15일 광장 점거 운동을 시작했던 좌파적 운동이 정치세력화하며 포데모스 창립으로 이어졌다.

포르투갈에서는 집권 우파 정당이 2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급진좌파가 모두 합쳐 17퍼센트를 득표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중도 좌파 민주당(PD)이 40퍼센트를 득표해 1위를 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전진 이탈리아당'과 이들의 동맹이자 분리주의적 우파 정당인 북부동맹은 각각 3위와 4위로 밀려났다.

흐름

그러나 영국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기 어렵다. 그 대신 영국 독립당이 크게 성장한 우려퍼스러운 결과가 유럽 전역에서 극우가 전진하고 있는 흐름

의 일부라고 떠드는 말이 많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네덜란드에서도 들어맞지 않는다. 헤이르트 빌더스가 이끄는 극우 정당인 자유당은 이번 선거에서 오히려 두 석을 잃었다. [반면에] 급진좌파인 사회당은 노동당을 근소하게 앞섰다.

많은 나라에서, 유럽연합을 지지하는 신자유주의 중도 세력은 경제 위기와 긴축이라는 철퇴를 맞고 입지가 좁아졌다. 독일처럼 경제 위기가 비교적 덜했던 나라에서 중도 세력이 자리를 지킨 것이 놀랍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독일에서조차 유로화에 반대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 일곱 석을 차지했다.

정치적으로 아주 다양한 세력들이 중도 세력이 약해지면서 생긴 자리를 매우려 한다. 사회민주주의 정당들한테는 확실히 우려퍼스러운 상황이다.

2009년 선거 때는 영국 노동당뿐 아니라 여러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함께 패배를 맛봤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

경제 위기의 쓴 맛을 본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지해 주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도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들도 신자유주의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사회당 소속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대선에서 승리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지만 이번에 수모스러운 완패를 당했다.

그리스에서도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회당(PASOK)은 겨우 8퍼센트밖에 못 얻었다. '올리브나무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는데도 그랬다. 사회당은 26.6퍼센트를 득표한 시리자보다 한참 뒤처졌다.

아일랜드 남부에서는 [좌파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당이 노동당을 제쳤다. 노동당은 긴축을 추진한 연정에 참여했고 이번에 4위로 밀려났다.

이탈리아 민주당은 정부에 참여하고 있고, 마테오 렌치가 새 지도자다. 그는 [영국 노동당이 신자유주의를 수

용하는 데 앞장선 전(前) 총리] 토니 블레어를 추종하고, 긴축을 단지 더 살살 하겠다고 말할 뿐이다. [포퓰리스트 정당인] 오성운동은 이번 선거에서 2위를 했고 렌치가 실수하면 공격하려고 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하나같이 [영국 노동당 현 대표] 에드 밀리반드에게 우려퍼스러운 일이다. 노동당은 여전히 내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될 듯하다. 그러나 단독으로는 정부를 수립할 수 없고 어쩌면 사람들이 매우 싫어하는 자유민주당과 손잡아야 할지도 모른다. 아무튼 취약한 정부가 될 것이고 좀 더 '인간적으로' 긴축을 추진하겠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영국 독립당이 성장한 모양이 되기도 한] 사람들의 분노라는 불길에 기름만 더 붓는 꼴이 될 것이다.

진정한 대안을 건설하는 일이 지금보다 더 시급했던 적은 없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05호 / 번역 김중환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득표 1위

지배자들을 압박한 그리스 유권자들

그리스의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대중이 좌경화하고 있고 반격을 바라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적 활동가이고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

유럽의회 선거 이후 그리스 정부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투표 결과를 보면, 대중이 좌경화하며 보수 정당인 신민당과 우경 개혁주의 정당인 사회당의 표가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급진좌파 정당인 시리자는 이번 선거에서 1위를 했다. 이는 정부의 긴축 정책에 맞서 지난 2년여 동안 일어난 노동자 투쟁의 결과물이다.

나치 정당인 황금새벽당은 지도부 몇 명이 수감돼 있거나 형사 기소된 와중에도 유럽의회 의원을 3명 배출했다.

신민당은 진땀을 빼며 유럽의회 선거는 정부를 선출하는 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민당과 그 연정 파트너 사회당은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겨우 일주일 만에 유럽의회 선거에서 또다시 패배를 겪었다. 5월 18일에 지방선거 1차 투표가 있었고 5월 25일에 지방선거 2차 투표와 유럽의회 선거가 함께 치러졌다. — 역자]

시리자는 수도 아테네를 둘러싸고 있고 주로 노동계급이 거주하는 지역인 아티카 주(州) 선거 결선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아테네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공산당도 지방선거에서 표가 늘었다. 그러나 공산당은 종파적 태도를 취하며 아테네 선거 결선 투표에서 시리자에 반대해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1차 투표 때 공산당에 투표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결선 투표에서 시리자에 투표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이 속해 있는 혁명적 반자본주의 연합 안타르시아는 표가 줄었다. 정부를 뒤흔들 수 있도록 시리자에 표를 몰아 주자는 정서 때문이었다.

그래서 안타르시아는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4만 표를 득표했고 지방선거에서는 13만 표를 득표했다. 그러나 우리는 극좌파의 주장을 경청하는 청중이 많다고 본다.

진정 중요한 문제는 선거에서 나타난 표

심이 조직화와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않아서 기다리는 태도로 이어질 것이냐다.

우리는 황금새벽당을 고립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그것은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황금새벽당이 받은 재판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2012년 — 역자] 총선에서 황금새벽당이 성공한 이후 인종차별적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런 상황은 위험하다.

그리스 정부는 긴축이 최악의 국면을 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가 더 많은 긴축을 추진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정부는 올해 가을까지 흑자 재정을 달성하려 애쓰고 있다.

흑자 재정 달성은 그리스 정부가 유럽 은행들에 진 빚을 확실히 갚게 하기

위해 "트로이카"[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IMF — 역자]와 맺은 계약의 이행 조건 중 하나다.

현재 학교 폐쇄를 막기 위한 투쟁이 진행 중이다. 공무원 대량 해고에 맞선 큰 싸움도 있다. 그중 가장 격렬한 싸움은 재무부 청소 노동자(주로 여성) 투쟁이다. 그들은 정리해고에 항의해 유럽의회 선거 직전에 장관 출입구를 잠그었다.

이런 투쟁들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이 정부를 무너뜨리려면 기다려서는 안 된다. 지금 반격을 조직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05호 / 번역 차승일

프랑스 유럽의회 선거 관련 소식은
본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spaper.org>

유럽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파시즘·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성과와 과제

유럽의 주류 정당들은 우익 포퓰리즘 정당과 파시스트 정당이 성장할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해 왔다. 예컨대 영국의 우익 포퓰리즘 정당 영국독립당(UKIP)이 이주민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인기를 얻자, 보수당과 노동당은 앞다퉀 ‘내가 이주민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프랑스에서도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가 인종차별 정책을 강조하자 파시스트 마린 르펜은 “내가 원조”라고 응수할 수 있었다. 사회당도 대선 승리 이후 로마인을 대규모 강제 추방하며 인종차별 정서 확산에 일조했다.

주류 정당들이 긴축을 시행하며 노동자들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긴 것도 파시즘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됐다. 우익 포퓰리즘과 파시즘을 막을 진정한 대안을 건설해야 한다.

유럽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파시즘을 어떻게 보고 그에 맞서 싸우는지를 소개한다.

김종환 기자가 유럽의회 선거 직전에 영국, 그리스, 네덜란드 사회주의자들과 토론한 내용을 정리했다.



“이주민 희생양 삼기에 반대한다”

유럽의회 선거는 끝났지만 거리와 작업장에서의 운동은 계속된다. 3월 22일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 영국 런던.

황금새벽당 문제는 그리스 정치의 핵심 쟁점

그리스에는 파시즘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황금새벽당이 있다. 그들은 지난해 반파시즘 활동가이자 가수인 파블로스와 이주민을 거리에서 살해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K) 등 사회주의자들은 즉각 항의 시위를 조직했고, 이 시위는 공공부문 총파업과 결합돼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압력을 받은 정부는 수사에 나섰고 황금새벽당은 몇몇 지도자들이 구속되는 등 궁지에 몰렸다.

그리스 사회주의자들은 지난 3월 22일에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도 조직했다. 이날 아테네, 테살로니키, 크레타 등지에서 그리스 좌파와 노동조합이 연계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공산당은 이 시위에 참여하길 거부했다.)

그리스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이고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적 활동가인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말했다. “황금새벽당 문제는 이제 그리스 정치의 핵심 쟁점이 됐고, 그 때문에 정부에 균열이 생겼다. 총리 보좌관이 황금새벽당 대표직무대행과 비밀리에 나눈 대화가 폭로됐다.[황금

새벽당 대표는 파블로스 살해 이후 범죄조직 결성 죄로 수감돼 있다.]

“그 둘은 경찰의 황금새벽당 수사와 사법 처리를 주도하는 판사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나눴다. 엄청난 스캔들이었고 결국 총리보좌관이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보면 반파시스트 운동이 그리스 정치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시리자 지도부 일부는 황금새벽당이 선거에서 우파의 표를 분산시킨다고 여긴다. [그래서 황금새벽

당에 맞서 행동을 건설하는 데 미온적이다.] 이런 실수는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됐다. [약 30년 전] 프랑스 [사회당]의 미테랑도 장-마리 르펜(프랑스 국민전선 현 대표 마린 르펜의 아버지, 당 창립자)이 처음 등장했을 때 같은 생각을 했었다.

“시리자의 한 지도적 국회의원은 황금새벽당에 대한 수사가 정부의 음모라고 주장했다가 반감을 크게 사기도 했다. 이렇듯 그리스에서 황금새벽당을 둘러싼 논쟁은 좌파 안에서도 아주 뜨겁고 광범하다.”

우익 포퓰리즘은 파시스트가 활개칠 토양을 만들어 준다

영국에서는 강력한 반파시즘 운동 덕분에 파시스트 정당 영국국민당(BNP)은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의석을 대부분 잃었고 그 지도자 닉 그리핀도 낙선했다.

그러나 우익 포퓰리즘 정당 영국독립당(UKIP)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들은 긴축을 추진하는 기성 정당들에 반대하는 듯이 말하지만 이주민 인종차별을 분명하게 내세운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중앙위원 알렉스 켈리니코스는 영국독립당의 전략을 이렇게 지적한다. “영국독립당은 영국국민당과 같은 부류로 보이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스러워한다. 두 정당의 핵심 지지층(민족주의적인 중년 백인 육체 노동자)이 일치해서, 영국독립당이 영국국민당과 거리를 두려 한

다는 것은 상황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영국독립당이 파시스트들을 출당시키고 영국국민당처럼 보이지 않으려 하는 것은 선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세간에 파시스트로 보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수십 년에 걸친 반나치동맹(ANI)과 반파시즘연합(UAF)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영국독립당

“지난 10년 동안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여기에는 반전 운동도 포함된다) 덕분에 다문화주의를 존중하고 인종차별을 나쁘게 보는 인식이 광범하다. 영국독립당은 그런 현실에 적응하려 한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영국독립당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파시스트가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주류 부르주아 정당에 있는 인종차별적 우익 포퓰리즘 성향의 집단·개인들과 노골적인 파시스트 정당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둘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다.

“우익 포퓰리즘은 사회 전반에 인종차별 정서를 퍼뜨려서, 파시스트들이 활개칠 조건을 만들어 준다. 영국에서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이녹 파울[당시 보수당 의원으로, “이민자들이 영국의 집”이라는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유명하대]이 그랬다. 파울 자신은 [파시스트가 아니라] 보수당 우파였지만, 결과적으로 영국 국민전선과 영국국민당 같은 정통 파시스트 정당이 등장할 기틀을 마련하는 구실을 했다. 비록 정책면에서 이녹 파울은 파시스트들과 달

랐지만 말이다.

“이른바 ‘정장 입은 파시스트’[유로파시스트]들이 나타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정장 입은 파시스트’는 파시스트 세력이 중핵을 이루고 있지만, 겉으로는 단지 인종차별적이고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양 행세하는 정당을 가리킨다. 프랑스 국민전선이 성장한 비결이기도 하다.

“파시스트 정당은 득표를 위해 우익 포퓰리즘 정당 행세를 하지만, 지도부와 당의 동역학 측면에서 여전히 우익 포퓰리즘 정당과 확연히 다르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의 경험을 빌어 우익 포퓰리즘 정당과 파시스트 정당의 관계에 관해 말했다. “그리스에서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황금새벽당이 부상하기 전에 라오스당이 부상했었다. 라오스당은 그리

네덜란드

인종차별 반대 운동, 자유당을 정조준하다

네덜란드의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자유당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기에는 네덜란드 혁명가들이 조직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일조했다.

네덜란드의 사회주의자 막스 반 링엔의 말이다. “자유당 대표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주류 우파 정당에서 떨어져 나온 후 파시즘과 애써 거리를 뒀다.

그는 언제나 무슬림과 이슬람에 대해서는 애기했지만 [이주민의 다수를 이루는] 모로코인이나 터키인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자유당은 종교에 대해 비판적일 뿐 인종차별적이진 않다는 것이었다. 또한 극우 시온주의 단체와의 유대를 강조했다.

“그런데 지난해 자유당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더 오른쪽으로 급진화했다. 파시스트들이 포함된 대중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고, 3월 지방선거 때는 네덜란드에 모로코인이 너무 많이라며 인종차별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빌더르스는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의 파시스트 정당들과도 손잡았다. 물론 빌더르스는 그 정당들이 변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그 자신이 파시스트 조직과 거리를 두던 것에서 바뀐 듯하다.

“3월 22일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국제 공동 행동의 날’은 자유당에 반대하는 초점을 제공했다. 8천 명이 모여서 ‘우리는 모두 모로코인이다’ 하고 외치며 반대 시위를 했다. 이 시위는 지난 10년간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아주 성공적이었다.”

스정교회 보수계 정당을 자처했고, 황금새벽당은 라오스당이 조성한 정서를 활용했다. 두 가지 방식으로 활용했다.

“첫째, [라오스당이 부추긴] 무슬림 혐오와 인종차별은 이주민을 적대하는 정서를 낳았고, 황금새벽당은 이주민을 공격하면서 자신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이 노골적인 파시스트 세력이 청중을 얻었다.

“또 다른 방식은 ‘정장 입은 파시스트’라는 방법이다. 파시스트들은 [라오스당 같은] 우익 포퓰리즘 정당 안에서 활동하며 나중에 독립할 기반을 닦았다.

“그래서 그리스처럼 파시즘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정당이 있는 조건에서도 우익 포퓰리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의제에 반대하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유럽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다.”

데이비드 하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읽다

〈노동자 연대〉는 지난 호에 이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21세기 자본론》 비평을 싣는다. 데이비드 하비는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 국내에 《맑스 자본 강의》, 《자본의 한계》,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력에서 점령운동까지》 등의 책이 출판돼 있다.

하비는 이 글에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말까지의 장기 호황을 케인스주의 정책에서 비롯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당시에 매우 높은 수준의 군비 증강이 자본의 유기적 구성 증가율을 억제해 이윤율 하락 경향을 상쇄시켰다는 또 다른 마르크스주의자 고(故) 크리스 하먼(1942~2009)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

1. 피케티 주장의 의의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이라고 불리는 책이 꽤나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세습”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시류를 거스를 유일한 방안으로 누진세 제도와 국제적 부유세 도입을 옹호했다.

피케티는 “세습” 자본주의의 특징이 부(富)와 소득의 “끔찍한” 불평등이라고 꼬집었다. 피케티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난 2백 년 동안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상세히 밝혔다.

피케티는 특히 부가 하는 구실을 집중으로 다뤘다. 피케티는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부를 [평범한 사람들에게까지] 확산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보는 널리 퍼진 견해를 허물어 버린다. 국가가 하는 주요한 재분배 기능이 모두 사라진 자유시장 자본주의에서는 비민주적인 소수 지배가 생겨난다는 것을 그는 보여 준다. 그가 이런 사실을 입증하자 자유주의자들은 격분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게거품을 물었다.

사람들은 흔히 피케티의 책을 19세기에 쓰인 마르크스의 동명의 책을 밀어낼 21세기의 저작으로 본다. 사실 그는 그럴 의도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그의 책은 자본에 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피케티의 책은 2008년의 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장기 실업과 주택 압류가 가하는 이중의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그의 책은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이 왜 중국과 달리 부진한 것인지, 유럽은 왜 긴축의 정치와 경제 부진에서 움썽달싹 못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극심한 불평등

피케티는 통계 자료(우리가 그와 그의 동료들에게 감사히 여기는)를 통해 자본주의 역사 내내 자본이 전례 없이 극심한 수준의 불평등을 일으켜 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게다가 마르크스가 자신의 《자본론》 1권에서 제시한 이론적 결론도 정확히 그런 사실이다.

피케티는 마르크스가 이미 그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데 놀랄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파 언론이 마르크스주의자이면서 아닌 척한다고 피케티를 비난했을 때 그 자신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어 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기 때문이다.

피케티는 많은 자료를 끌어모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관한 그의 분석은 설득력이 있고 유용하다.

그리고 피케티는 상속세, 누진세 제도, 국제적 부유세를 도입하면 부와 권력이 더 집중되는 것에 맞설 수 있으리라는 주장도 세심하게 옹호한다. (비록 그런 조처들의 도입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지만 말이다.)



피케티가 주장했듯이, 자본주의 체제는 끔찍한 수준의 불평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2. 불평등을 지속 강화하는 동력

그런데 불평등 추세가 갈수록 커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제인 오스틴과 발자크를 넘어서 언급하는 말쑥한 문학작품으로 흥미를 더한 통계 자료에서 피케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수학적 법칙을 끌어냈다.

그것인 즉, 유명한 ‘1퍼센트’(‘점거하라’ 운동 덕분에 널리 즐겨 쓰이는 용어)가 전례 없이 어마어마하게 부를 쌓을 수 있는 것은 자본소득률(r)이 소득증가율(g)보다 항상 높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자본의 “핵심 모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통계 자료에서 규칙성을 찾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법칙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 그런 모순을 일으키고 유지시키는 동력은 무엇인가? 피케티는 아

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법칙은 법칙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하는 동어반복을 할 뿐이다.

마르크스라면 자본과 노동 간 힘의 불균형을 그런 법칙이 생기는 요인으로 지적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설명이 지금도 여전히 타당하다.

1970년대 이래 국민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몫은 꾸준히 떨어져 왔다. 자본이 과학기술, 실업, 해외 이전, 반노동자적 정치(예를 들어 마거릿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이 시행한 정책)를 동원해 노동운동을 파괴해서 노동의 정치적·경제적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마거릿 대처의 경제 자문을 지낸 앨런 버드가 무심코 털어놓았듯이, 1980년대에 시행된 몰가 인상 억제 정책은 “실업을 늘리는 매우 좋은 방법이었고, 실업 증가는 노동계급의 힘을 꺾

아 내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었음이 드러났다. “그 정책이 의도한 바는 마르크스의 용어로 말하면 자본주의의 위기, 곧 산업예비군을 다시 창설하고 자본가들이 전례 없이 높은 이윤을 얻게 하는 위기였다.”

1970년에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보수는 보통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30배 가량 많았다. 현재 이 수치는 3백 배를 웃돌고, 맥도널드 같은 곳에서는 1천 2백 배 정도 된다.

유효수요 부족

그런데 《자본론》 2권(역시 피케티가 읽지 않은 동시에 별 거리낌 없이 일축해 버리는 책)에서 마르크스는 임금을 낮추려는 자본의 노력이 어느 순간이 되면, 자본이 만든 생산물을 흡수하는 시장의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일찍이 헨리 포드는 이런 딜레마를 인식했다. 그래서 그는 소비 수요 진작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하루 8시간씩 일 시키며 일당 5달러를 주는 제도 [1914년 당시 상황에서 이 제도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두 배 가량 높인 것이었다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많은 사람들이 1930년대 대불황이 유효수요 부족으로 더 심각해졌다고 봤다. 그런 정서 덕분에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케인스적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이 힘을 얻었다. 그리고 강력한 수요가 경제 성장을 이끌면서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 줄었다.(부의 불평등은 그리 많이 줄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해법을 실행하려면 노동계급의 힘을 비교적 강화하고, 누진세로 재원을 확보하는 “사회적 국가”(피케티의 용어)를 건설해야 했다.

피케티는 이렇게 쓴다. “1932~80년

이라는 반세기에 가까운 시기 내내 미국 연방정부 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평균 81퍼센트였다.” 그럼에도 경제 성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이 사실도 우파의 신념을 논박하며 내놓은 피케티의 증거다.)

1960년대 말이 되면 자본가들이 과도해진 노동계급의 힘에 대해 무언가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분명히 느끼게 됐다.

그래서 케인스는 존경받는 경제학자의 지위를 잃었고 대신 밀턴 프리드먼의 공급자 중심 사상이 득세하게 됐다. 세금을 안정시키거나 심지어 낮추고, “사회적 국가”를 파괴하고, 노동계급의 힘을 길들이려는 성전(聖戰)이 일어났다.

1980년 이후 미국에서는 최고 세율과 자본소득(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주요 소득 원천)에 매기는 세금

3. 피케티의 잘못된 자본 개념

피케티의 주장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가 자본에 대한 잘못된 개념 규정에 기대어 생기는 문제다.

자본은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다. 자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순환 과정으로, 대개 노동력을 착취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과정이다.

그러나 피케티는 자본을 개인·기업·정부가 보유한 자산 일체로 규정하며 그 자산이 사용되든 말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의 자본 개념에는 토지, 부동산, 지적재산권은 물론이고 개인의 예술 작품과 귀금속도 포함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술적 난제로, 합의된 바가 없다.

자본의 가치

자본수익률(r)을 제대로 계산하려면 초기 자본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측정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산에 이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얼마인지, 또는 그것이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는지와 무관하게 초기 자본의 가치를 측정할 방법은 없다.

신고전학과 경제 사상(피케티 사고의 토대) 전체가 동어반복에 기초하고 있다. 자본수익률이 얼마나 될지는 결정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될지에 달려 있다. 자본의 가치가 그 자본이 생산한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 자본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의 가치는 투기적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아 그 유명한 “불합리한 과열” 탓에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 (“불합리한 과열”은 앨런 그린스펀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특징으로 지목한 것이다.)

자본이 무엇인지를 규정할 때, 헤지펀드 운영자들이 수집한 예술 작품은

말할 것도 없고 주택과 부동산도 제외한다면(주택과 부동산이 자본에 포함돼야 할 근거는 희박하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피케티의 설명은 허물어져 버린다. 비록 과거와 현재의 불평등에 관한 그의 묘사는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말이다.

화폐, 토지, 부동산, 공장, 설비는 생산에 쓰이지 않으면 자본이 아니다.

생산에 사용되는 자본의 수익률이 높다면, 그것은 자본의 일부가 순환에서 빠져나가 사실상 투자 파업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신규 투자에 대한 자본의 공급을 줄이면(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순환되고 있는 자본의 수익률을 확실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품귀현상을 만들어 수익률을 높이려 하는 행동은 석유 기업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자본이 틈만 나면 하는 짓이다.

바로 이런 행태 탓에 자본(어떻게 정의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든)의 수익률이 소득 증가율보다 항상 높은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행태가 바로 자본이 자신을 재생산하는 방식이다. 자본은 우리 나머지에게 어떤 나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본가 계급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피케티가 모아 놓은 자료는 가치가 크다. 그러나 왜 불평등이 생기고 왜 소수가 지배하는 경향이 생기는지에 관한 그의 설명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다. 불평등을 해소할 치료법으로 그가 내놓은 방안은 순진하고 심지어 공상적이기도 하다. 분명히 그는 21세기의 자본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지 못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여전히 마르크스나 마르크스에 필적하는 현대 사상가가 필요하다.

출처 데이비드 하비 웹사이트(davidharvey.org)

번역 차승일

이 낮아졌다. 그 결과 부가 상위 1퍼센트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졌다.

그러나 피케티가 보여 주듯이, 경제 상황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경제가 성장하면 부가 부자들에게서 나머지 평범한 사람들에게로 흘러넘치리라는 “트리클다운”(낙수 효과; 우파들이 아주 좋아하는 또 다른 믿음)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피케티가 말하느] 무슨 수학적 법칙 때문이 아니다. 정치가 작동한 결과였다.

그런데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더 화급한 문제가 닥쳤다. 바로 수요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1990년대에 이 문제는 서브프라임 시장에 담보대출 자금이 많아지는 등 신용이 막대하게 확장되며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자산 거품이 2007~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신

용제도 붕괴로 터지게 됐다. 그럼에도 2009년 이후 이윤율은 빠르게 회복됐고 부는 소수에게로 더한층 집중됐다. 반면 경제 상황과 나머지 사람들의 처지는 나빠졌다.

이제 미국에서 기업의 수익성은 [2008년] 경제 위기 전만큼 올라갔다. 기업들은 돈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그 돈을 쓰지 않으려 한다. 시장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케티가 공들여 만들어 낸 수학적 법칙은 이런 상황에 담긴 계급 정치에 관해 보여 주는 것보다 감추는 것이 더 많다. 워런 버핏이 말했듯이, “확실히 계급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 계급이, 부자들이 승리하고 있다.” 저들이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핵심 척도 하나는 상위 1퍼센트의 부와 소득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견줘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자편지

ws@wspaper.org

6월 11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전기원 노동자들이 파업 경고로 한전을 물러서게 하다

안전한 현장을 위해 투쟁에 나선 건설노조 전기원 노동자들이 승리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한국전력은 전기원 노동자들의 핵심요구인 의무고용인원 감축 중단을 약속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한전의 원가절감 계획과 배전 부분 민영화 준비 작업은 차질을 빚게 됐다. 또, 한전은 ‘고압선을 손으로 직접 만지며 작업하는 직접활선공법이 빈번한 산재사고의 원인’이라는 점도 인정하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전기원 노동자들이 전국의 배전공사를 멈춰서라도 안전한 작업 현장을 만들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였기 때

문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 한국전력은 파업 돌입 직전에 서둘러 양보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체제’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전기원 노동자들의 승리는,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들의 단호한 파업에 부담감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 줬다. 또 노동자들이 이 사회의 안전을 진정으로 책임질 의지와 능력을 가졌다는 점도 보여 줬다.

지금 전기원 노동자들은 첫 승리의 성과를 딛고 곧바로 다음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전기공

사업법 개정,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며 6월 말 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의무고용인원을 법제화하고, 관리감독과 위반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분노가 큰 지금,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이런 노동자들을 결집시켜야 한다. 전국건설산업연맹 산하 건설노조·건설프랜트노조·건설기업노조는 7월 중순경에 시기를 집중해 ‘대정부 총파업 상경 투쟁’을 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6월 투쟁에 함께하며 7월 파업의 힘을 모아가자.

박재순 건설노조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 조합원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맞서 싸운 것은 무죄다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은 철도노동자들의 정의로운 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철도노동조합 지도부를 잡겠다고 민주노총을 침탈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건물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와 수백 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다.

5월 29일,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철도 노동자들을 포함한 7인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해당 사람들에게 벌금 2백~3백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연행됐던 ‘노동자연대’ 단체 회원 전성호 동지는 재판이 시작될 때 모두 진술을 했다. 그는 철도 민영화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과 “이 파업에 대한 광범하고 뜨거웠던 국민적 지지야말로 누가 정당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순간 판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얘기만 하라”며 “사회적 이슈’와 같이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면 제지하겠다”고 했다.

전성호 동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모두 진술을 이어갔다.

“그런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고 거짓말을 하며 민주노총 본부까지 침탈하며 이 파업을 탄압했고 지금도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노총은 한국을 노동권이 가장 지켜지지 않은 최악의 나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징계와 형사 처벌입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도 지켜지지 않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판사가 ‘사회적 이슈와 같이 관련 없’다던 얘기가 이 재판과 매우 긴밀하다는 점을 얘기한 구절이었다. 평강히 통과했다.

마지막으로 전성호 동지는 “만약 이것은 불법이라 규정되고 처벌받는다면 이것은 사회의 퇴행이고, 역사의 후퇴입니다. 저는 이 법정에서 철도 민영화 반대 운동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저와 함께 투쟁한 동지들의 무죄를 주장하며 싸워 나갈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철도 민영화’라는 재앙을 막기 위해, 철도 파업을 지지하며 경찰의 악랄한 민주노총 침탈을 운명으로 막은 동지들은 명백히 무죄다.

박혜신

부산지하철 무인 승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는 것

세월호 참사는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이 체제가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이윤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 사회의 곳곳에 이런 비극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타고 다니는 부산 지하철 4호선은 무인선이다. 지하철 4호선의 맨 앞 칸은 선로를 바로 볼 수 있을 만큼 아예 운전석을 만들어 놓지 않고 설계됐다.

애초에 부산지하철공사는 4호선에 무인역까지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는 무척이나 위험한 발상이다. 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자. 사고가 나면 정말로 시민들이 알아서 수습해야 한다. 대피할 길도 시민들이 알아서 찾아야 한다. 이는 정말로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2009년 부산지하철노조의 파업 덕분에 무인역 설치는 좌절됐지만, 부산지하철공사는 여전히 각 역의 근무 인원은 줄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무인 승무는 실시되고 있다. 각종 지하철 사고들이 그나마 크게 벌어지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그래도 한 명이라도 기관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관사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열차를 수동으로 멈출 수 있다. 그러나 지하철 4호선은 무인선이기 때문에 불이 나거나 관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수동으로 그 열차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부산지하철공사는 그런 4호선에 관제 인원도 줄였다고 한다. 관제는 신호, 운전, 통신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 부분들을 통합해 인원을 줄였다는 것

이다. 지하철 4호선을 타는 사람들은 안전과 생명을 늘 위협당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선박 연령을 늘린 것이었는데, 철도와 지하철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지하철공사는 2012년에 내구연한 25년을 넘긴 차량을 15년간 더 사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내구연한을 넘긴 2백16량의 차량이 현재 운행 중이다. 부산지하철공사는 “리모델링”했으니 괜찮단다!

부산지하철만 이런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 곳곳에서 이윤 추구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내버리고 있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이런 체제에 도전해야 한다.

박준희



보도 통제에 맞서 파업에 돌입한 KBS 노동자들

김지윤

“청와대의 노예로, 관제 사장의 머슴으로 살던 우리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KBS 노동자들이 “청와대의 하수인” 김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보도 통제를 더는 참지 않겠다고 일어난 것이다.

5월 28일 KBS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예정됐던 김환영 사장 해임안은 6월 5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와 KBS노동조합(‘1노조’)은 29일부터 공동 파업에 돌입했다.

두 노조가 공동 파업에 나선 것은 2009년 노조 분리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환영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어찌나 컸던지 파업 찬반 투표에서 새노조의 파업 찬성률은 94.3퍼센트, 1노조의 파업찬성률은 83.1퍼센트를 기록했다. 새노조가 1천2백여 명, 1노조는 2천6백여 명으로, 전체 KBS 노동자의 80퍼센트가 넘는 인원이 일손을 놓은 것이다.

파업에 앞서 기자회견은 열흘 넘게 제작 거부를 벌였고, PD협회도 두 차례 제작 거부를 한 바 있다. 보직간부 3백여 명도 줄줄이 사퇴했다.

제작 거부의 효과로 이미 9시 뉴스는 방영 시간이 줄고, “연합뉴스에 자막을 입히는 수준”으로 방영되고 있다. 파업이 시작되며 <추적 60분>이 결방되는 등 제작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드라마 일부도 제작이 중단됐다. 파업이 길어지면 파업 효과는 더 두드러질 것이다.



“청와대의 하수인 김환영은 퇴진하라” 5월 29일 언론노조 KBS본부·KBS노동조합 공동 파업 출정식

KBS의 참사 보도는 보도 참사였다

세월호 참사 보도는 김환영이 진두지휘하는 KBS의 민낯을 드러냈다. 참사 보도는 보도 참사였다. 분노한 유가족들이 KBS로 행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KBS는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는 물론이고, 총력 구조·선내 진입 등 확인되지도 않은 정부 측의 말만 앵무새처럼 내보냈다.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없고, 박수받는 박근혜 모습만 전파를 탔다.

결국 KBS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목살 잡히고, “기레기”(기자 쓰레기) 소리를 듣기 일쑤였다. “KBS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처지가 된 것이다. 5월 초, 막내 기자들의 ‘양

심 고백’이 이어졌다. 이런 상황 때문에 KBS 노동자들 사이에서 뭔가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세월호 막말로 자리에서 쫓겨난 전 보도국장 김시곤의 폭로는 언론 노동자들의 양심을 건드렸다.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주물러왔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제까지 폭로된 것만 봐도 김환영은 “해경 비판하지 말라”, “대통령 관련 보도는 20분 내로 하라” 등의 지시를 했다. (물론 김시곤도 박근혜 공약 파기를 공약 수정으로 보도하라고 지시했던 자다. 김환영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 정홍원은 국회

에서 “사태가 위중한 만큼 수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기를 올려 달라는 뜻으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의도치 않게(!) 보도 통제를 인정했다.

이렇게 탄생한 “청영방송(청와대를 위한 방송)”이 전파를 타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것이다.

KBS 사측은 “근로조건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올해 초, 법원은 MBC 파업이 합법이라며 “공정방송의 의무는 … 근로조건에도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든 김환영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



“세월호 희생자들의 눈이 가장 두렵다” 양심 고백에 눈물을 흘리는 KBS 노동자

다. 뿐만 아니라 새노조 권오훈 위원장의 말대로 KBS를 정권의 홍보도 구로 활용한 박근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KBS를 통째로 청와대에 헌납”한 김환영

김환영은 KBS 안에서는 “김완용”으로 불릴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김환영은 2009년 TV제작본부장 취임 이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정두언을 4개월 동안 5개 프로그램에 출연시켰다. G20 특집을 55시간이나 편성하기도 했다. 또한 <이병철 탄생 100주년 열린음악회>, 이승만·백선엽 특집 다큐멘터리 등도 김환영의 ‘작품’이었다. 2011년 콘텐츠본부장 취임 투표에서 불신임률은 88퍼센트에 달했다. 역대 최고 수치다.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편이 불방됐다. 또한 교양 프로그램 제작진까지 낙하

산으로 교체해 반발을 샀다.

김환영은 뉴스 큐시트를 사전에 검열해, 국정원 관련 보도를 축소하고 윤창중 성추행 보도를 뒤로 빼라고 지시했다. 김시곤은 박근혜 순방 때마다 폭지를 늘리느라 “몸살을 앓았다”고 불멘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김환영은 정권의 나팔수 구실을 톡톡히 했다. 박근혜의 유가족 연출 조문도, 박근혜 ‘사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유가족들의 입장도 KBS 뉴스에선 찾을 수 없었다. 김환영은 김시곤에게 사임을 종용하며 “청와대 지시를 거역하면 자신도 살아남을 수 없고 이건 대통령의 뜻”이라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최근에는 세월호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사실도 폭로됐다.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안행부 국장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김환영은 역시나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들의 정부에 딱 어울리는 하수인이다.

최근에는 김환영이 CNK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방송 총국장 시절 CNK

로부터 수천만 원을 험찬받아 프로그램 제작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후안무치한 자를 앞세워 언론을 장악해 왔다. 그 결과가 얼마나 추악하고 끔찍한지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자신들의 흥기로 쓰려는 것을 언론 노동자들은 더는 두고 봐선 안 된다.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

일부에서는 ‘MBC처럼 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을 내비치기도 한다. 지난 2012년 MBC 노조는 유례없는 장기간 파업(1백70일)을 벌이며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야가 김재철 사장 퇴진을 합의할 것이라며, 불확실한 전망 속에 그해 7월 복귀했다. 이후 징계와 해고가 이어졌다.

이듬해 3월이 돼서야 김재철이 해임됐지만, 김재철 사장 시절 본부장이었던 ‘공범’ 안광한이 사장 자리에 앉았다. MBC 사측은 여전히 악랄한 공격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KBS 두 노조는 김환영이 퇴진할 때까지 단호하게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강력한 투쟁으로 김환영이 물러나야 박근혜가 쉽사리 제2의 김환영을 앉히려 들지 못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높아야 파업 이후에도 사측의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서 싸울 수 있다.

파업 대체 인력 투입 시도 저지도 중요하다. MBC 사측이 대체인력으로 시용기자(경력기자)를 채용해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했던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언론노조도 실질적으로 연대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현재 상황은 불리하지 않다. 김환영의 배후세력인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중의 거센 불만에 직면해 있다. 국무총리로 점찍은 안대희가 돌연 자진 사퇴한 데다가, 지방선거 전망도 불안하다. 따라서 파업의 기세가 높은 지금 단호하게 파업을 유지하며 파업 효과를 높여 나가야 한다. 동시에, 파업을 향한 사회적 지지를 실질적으로 모아야 한다.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MBC를 비롯해 온갖 통제와 탄압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 줄 것이다.